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13

2021. 03. 04

www.nafi.re.kr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 3. 4

Vol. 13

ISSN	2733-8258
발행일	2021년 3월 4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성준

I. 서론

II. GDELT

III. GDELT로 살펴본 동북아 지역의 갈등 양상

IV. 개별 사례 1: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

V. 개별 사례 2: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VI. 결론

참고문헌

¹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2020년 기본연구과제 「한중일 복합갈등의 미래」의 일부를 요약·정리하였다.

- ▶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대 후반에 중국과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무역분쟁을 겪었고,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무역분쟁을 겪음
 - 이들 사례는 국가 간의 정치적(외교적) 갈등이 무역으로 전이된 사례
 -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 일본에 대한 높은 기술 의존도가 각각 약점으로 작용
 - 국가 간 외교적 갈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 ▶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을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
 - GDELT는 전 세계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 국가 간 관계의 변화를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국제관계의 변화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GDELT Event Database를 활용하여 국가 간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최근의 무역분쟁 사례와 비교 분석
- ▶ GDELT와 무역분쟁 사례의 비교
 -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GDELT에 기록된 사건(event)의 숫자가 증가
 -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양국 간 어조(tone)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됨
 -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 양국 간 어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출 제한 조치 직후에는 양국 간 어조가 더욱 급격히 악화됨
 -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진행되고 공식적으로 배치가 결정되면서 양국 간 어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이후 양국 간 어조가 다시 악화됨
 -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양국 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이 증가
 -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시기(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드 배치 공식화)에는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빈도가 동시에 더욱 큰 폭으로 증가
- ▶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제재, 과거사 관련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는 무역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례
 - 중국과 일본의 정치체제 및 경제제재 조치의 결과에 영향을 받음
 - 중간재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그 범위와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자협력 레짐 활용 등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및 기술 의존도 완화를 통해 경제보복 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I. 서론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중·일 세 국가는 이른바 동북아 분업구조를 형성할 만큼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정인교 외, 2003; 이재호 외, 2010).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중·일 세 국가 간 정치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지면서 무역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과 중국은 2016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였는데,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1일에 한국에 대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여파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외교적인 갈등의 결과로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중·일 세 국가가 마·중 갈등,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갈등이 미래에도 앞의 사례들과 같이 경제적인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례들을 통해 경제적인 보복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갈등의 변화 양상을 GDELT를 통해 살펴본다.

II. GDELT 개요

국제관계는 숫자보다는 언어로 표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텍스트 자료에 대한 분석 기법이 발달하면서 텍스트 자료와 같은 질적 자료를 숫자와 같은 양적 자료로 변환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있다. 숫자를 이용한 분석은 같은 사안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 자료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갈등 사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의 언론 기사를 수집한 후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발생하는 갈등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이는 국가 간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국가 간 갈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아래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GDELT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GDELT의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GDELT는 전 세계의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각각의 기사에 포함된 인물, 국가, 단체, 주제 등의 정보를 추출한 후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단, 기사 원문은 링크를 제공하고 본문은 제공하지 않는다. GDELT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GDELT가 수집하는 언론 기사에는 100가지가 넘는 언어가 포함된다. GDELT의 핵심적인 기능은 전 세계의 기사를 수집하고 이들 기사에 포함된 내용을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GDELT 원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구글(Google)의 빅쿼리(BigQuery)²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Google)의 빅쿼리(BigQuery)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GDELT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Event Database이다. Event Database는 1.0 버전과 2.0 버전으로 나뉘는데, 1.0 버전은 1979년부터 시작하고, 2.0 버전은 2015년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1.0 버전은 일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2.0 버전은 15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다만, 해당 시기부터의 기사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기사에 이전 시기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 2.0 버전이 1.0 버전보다 높은 빈도로 업데이트되므로, 2.0 버전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2.0 버전은 시계열의 길이가 1.0 버전보다 짧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GDELT는 사건을 코드화하여 제공하는데, Event Database에서는 이를 위해 CAMEO(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s) 코드 체계를 사용한다. CAMEO 코드 체계는 국가 간의 다양한 사건들을 분류하는 체계로서 WEIS(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³의 분류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WEIS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탈냉전 시대의 다양한 사건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손정욱, 2019). CAMEO 체계는 200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GDELT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Schrodtt(2012)의 버전이다. CAMEO 코드 분류체계는 행위자(actor)와 사건(event)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⁴ 행위자는 국가, 민족, 종교, 국제기구 등을 반영한다. 또한, 관련된 행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actor1과 actor2로 표기되는데, actor1은 행위를 한 개인(단체)이고, actor2는 행위를 받는 상대방이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actor1을 행위자, actor2를 상대방으로 표시하였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행위자가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² <https://cloud.google.com/bigquery/>

³ McClelland(1976)

⁴ Schrodtt(2012)에 표기된 명칭은 각각 actor codebook과 verb codebook이다.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간 갈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자를 식별하였다.

CAMEO 코드 분류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편의상 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자면, 대분류는 2자리수, 중분류는 3자리수, 소분류는 4자리수로 되어 있으며, 대분류의 수는 20개이다. 또한, 모든 대분류 항목은 중분류 항목을 포함하지만, 모든 중분류 항목이 소분류 항목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분류 번호 02는 “요청하다(Appeal)”라는 행위를 의미하고, 분류 번호 02의 하위 항목인 021은 “실질적 협력을 요청하다(Appeal for material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를 의미하며, 분류 번호 021의 하위 항목인 0211은 “경제적 협력을 요청하다(Appeal for economic cooperation)”를 의미한다. 반면, 분류 번호 02의 하위 항목인 022는 “정책지원과 같은 외교적 협력을 요청하다(Appeal for diplomatic cooperation, such as policy support)”를 의미하는데, 022에는 별도의 하위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 1]에는 CAMEO에 명시된 사건 유형 중 20개의 대분류를 정리하였다.⁵

[표 1] CAMEO 사건 분류

분류	설명(원문)	설명(번역)
01	Make Public Statement	공식 발표하다
02	Appeal	요청하다
03	Express Intent To Cooperate	협력할 의사를 표하다
04	Consult	상의하다
05	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외교적으로 협력하다
06	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실질적으로 협력하다
07	Provide Aid	원조를 제공하다
08	Yield	양보하다
09	Investigate	조사하다
10	Demand	요구하다
11	Disapprove	불만을 나타내다
12	Reject	거부하다
13	Threaten	위협하다
14	Protest	항의하다
15	Exhibit Force Posture	군사력(경찰력)을 과시하다
16	Reduce Relations	관계를 축소하다
17	Coerce	강제하다

5 중분류 및 소분류에 해당하는 사건 유형의 번역은 손정욱(2019)을 참조할 수 있다.

분류	설명(원문)	설명(번역)
18	Assault	공격하다(비정규전)
19	Fight	전투하다(정규전)
20	Use Unconventional Mass Violence	대량 살상을 저지르다

주: Schrodtt(2012)의 내용을 번역하였으며, 하위 항목들의 내용을 번역에 반영하였다.

GDELT Event Database는 CAMEO 코드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지표 또한 제공한다. [표 1]에 나타난 20개의 대주제 중 01부터 05까지는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 06부터 09까지는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10부터 14까지는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 15부터 20까지는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로 분류된다⁶ 이러한 분류는 CAMEO 코드에 기반한 사건(event) 유형을 보다 집합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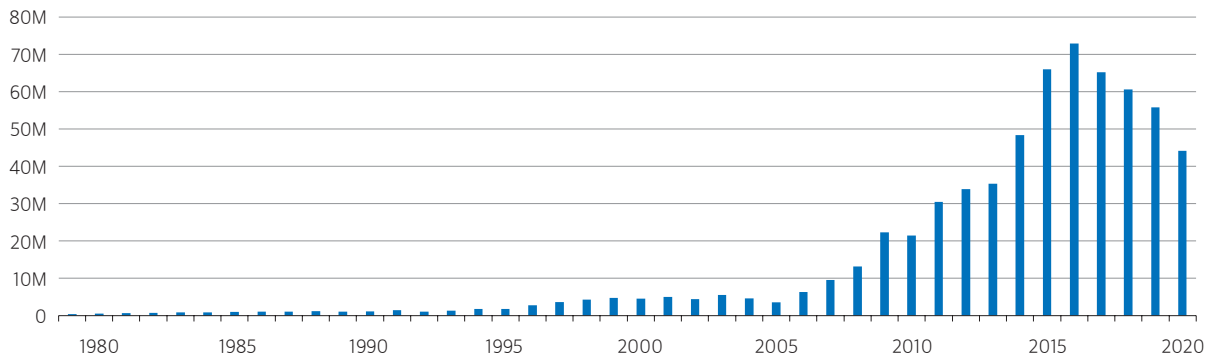
GDELT가 제공하는 흥미로운 자료 중 하나는 어조(Tone)이다. GDELT Event Database에서는 사건(event)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의 평균적인 어조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어조는 -10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나 대개 -10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다. 값이 0보다 작으면 어조가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값이 0보다 크면 어조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값이 클수록 어조가 긍정적이고, 반대로 값이 작을수록 어조가 부정적이다.

Ⅲ. GDELT로 살펴본 동북아 지역의 갈등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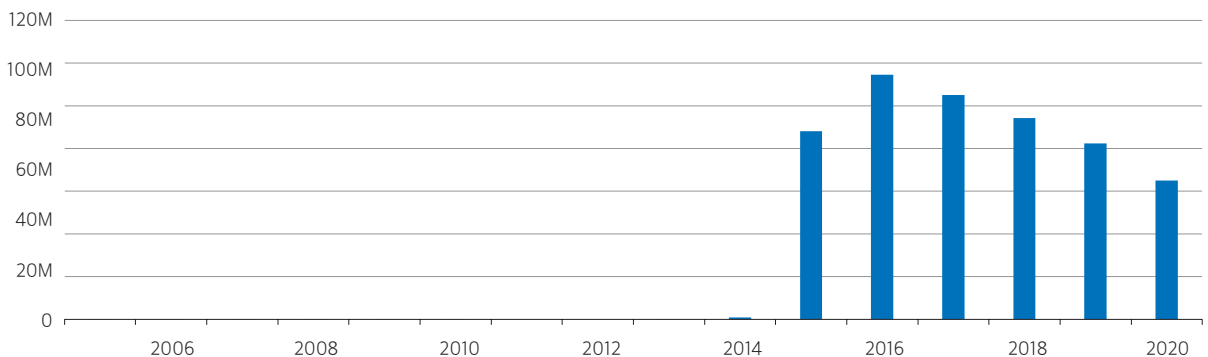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GDELT Event Database 버전 1.0과 2.0에 기록된 연도별 사건의 수를 나타낸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GDELT 버전 2.0은 2015년 초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전에 발생한 사건 역시 2.0 버전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으나 그 숫자는 매우 적다. GDELT 버전 1.0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사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이 시기에 실제 사건의 수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GDELT가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기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두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사건의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기록된 사건의 수는 2.0 버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⁶ Verbal Cooperation, Material Cooperation, Verbal Conflict, Material Conflict와 같은 용어에 대한 한글 번역을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연구자가 내용을 고려하여 임의로 번역하였다.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번역 용어와 원래의 용어를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사건의 수(GDELT 1.0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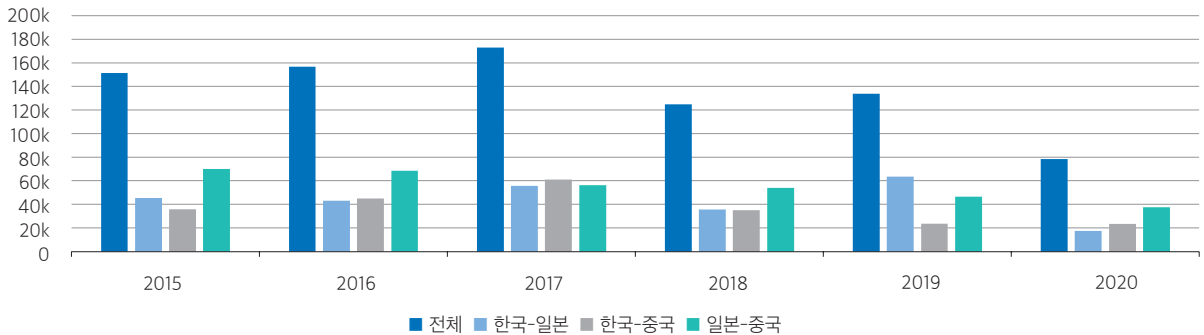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사건의 수(GDELT 2.0 버전)



[그림 3]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북아 국가들 간 기록된 사건의 수를 나타낸다. 데이터는 GDELT Event Database 버전 2.0을 사용하였다. [그림 3]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기간에 동북아 지역의 두 국가 간 발생한 사건의 수는 한 국가가 행위자인지 또는 상대방인지와 관계없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전체 사건의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것과 다르게 2017년과 2019년에 전체 사건의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겪었던 2017년에 한국과 중국 간 사건의 수가 2016년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여 무역 분쟁이 시작된 2019년에는 한국과 일본 간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9년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 사건의 수는 2018년보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수를 기준으로 단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양상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 및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상당히 컸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들 두 사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림 3] 동북아 국가 간 사건의 수(GDELT 2.0 버전)



IV. 개별 사례 1: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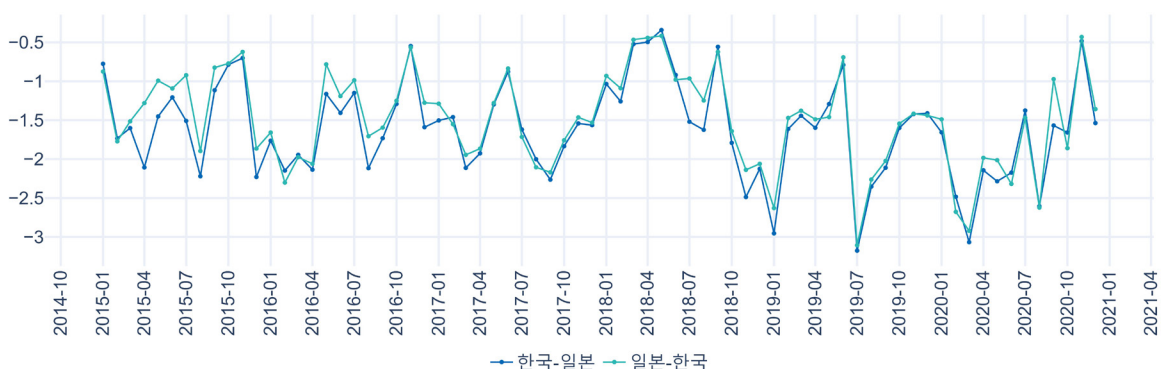
2019년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은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갈등이 무역갈등으로 전이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이로 인해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정부는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민간에서는 반일감정이 높아져서 일본 상품에 대한 대규모의 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다만,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성춘 외(2019)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약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국내 기업들의 재고 확보,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오히려 일본이 소비자 불매운동, 여행 자제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양국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소재·부품·재료 산업의 육성 및 공급선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면우(2020) 역시 삼성, SK 등 국내 기업이 적절히 대응하여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반도체 수출도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성춘 외(2019)와 마찬가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유니클로 의류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Heilmann(2016)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Heilmann(2016)은 과거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났던 불매운동을 분석하였는데, 불매운동은 소비재(consumer goods), 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진(highly-branded) 재화에 효과적이지만,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해서는 효과가 일시적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GDELT 데이터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림 4]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과 일본 간 어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는 GDELT Event Database 2.0 버전을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사건(event)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한국-일본은 행위자의 국적이 한국, 상대방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를 나타내고, 일본-한국은 행위자의 국적이 일본, 상대방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4]를 살펴보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부터 양국 간 어조의 톤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일본의 경우, 2018년 9월 -0.56에서 -1.79로, 그리고 11월에는 -2.49로 하락하였다. 일본-한국의 경우, 2018년 9월 -0.62에서 -1.64로, 그리고 11월에는 -2.14로 하락하였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시작된 2019년 7월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어조가 가장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한국-일본의 경우, 평균 어조가 약 -0.79에서 -3.18로 하락하였다. 일본-한국의 경우, 평균 어조는 약 -0.69에서 -3.11로 하락하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간의 어조는 이전 시기보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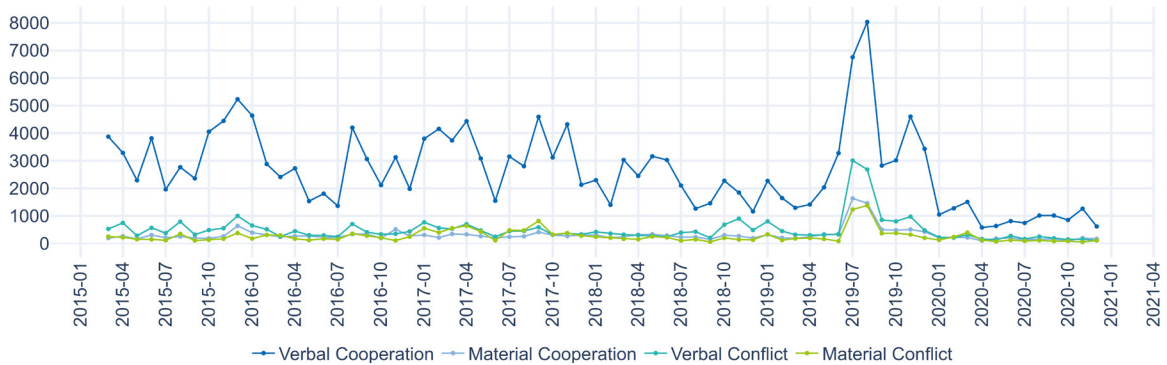
[그림 4] 한국과 일본 간 어조의 변화(GDELT 2.0 버전)



[그림 5]는 한국과 일본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를 나타낸다. 협력 및 분쟁은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수사적 분쟁(Verbal Conflict), 실제적 분쟁(Material Conflict)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4]와 마찬가지로 GDELT Event Database 2.0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이벤트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각 분류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다만, 행위자와 상대방은 구분하지 않았다.

[그림 5] 한국과 일본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GDELT 2.0)



[그림 5]를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 걸쳐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는 갈등이 커지는 시기에도 양국 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 기사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정부 등 다양한 주체 간에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를 통해 양국의 관계 변화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이 나타난 양국 간 사건(event) CAMEO 코드는 「040 상의하다(Consult, not specified below)」(8.1%), 「061 경제적으로 협력하다(Cooperate economically)」(7.1%), 「020 요청하다(Appeal, not specified below)」(5.7%), 「010 공식 발표하다(Make statement, not specified below)」(5.3%), 「042 방문하다(Make a visit)」(5.2%), 「046 협상하다(Engage in negotiation)」(5.1%) 등이다.

반면,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다가 양국 간 갈등이 커지는 시기에 빈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의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직후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빈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전체의 1.0% 이상 나타나는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 관련 CAMEO 코드는 「114 공식적으로 항의하다(Complain officially)」(3.8%), 「111 비판 또는 비난하다(Criticize or denounce)」(3.5%), 「110 불만을 나타내다(Disapprove, not specified below)」(3.2%), 「120 거부하다(Reject, not specified below)」(2.6%), 「112

비난하다(Accuse, not specified below)』(2.1%) 등 8개가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체의 1.0% 이상 나타나는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 관련 CAMEO 코드는 「163 금수조치, 보이콧, 제재를 가하다(Impose embargo, boycott, or sactions)』(2.7%), 「160 관계를 축소하다(Reduce relations, not specified below)』(1.5%), 「190 군사력을 사용하다(Us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not specified below)』(1.4%), 「172 행정적 제재를 가하다(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specified below)』(1.9%) 등 4개가 있다. 이는 직전 시기인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비중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이 4개,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이 0개인 것과 대비된다.

V. 개별 사례 2: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한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의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루는 주요 요소이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및 핵실험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드의 배치는 2016년 7월에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 탐지범위에 중국의 동부 연안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중국의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2017년 10월 31,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사드의 배치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방 중 하나이고, 북한과의 관계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의 영향에 관해 여러 연구에서 분석하였는데, 신현수(2017)는 대중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경제보복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주로 관광, 문화(한류), 유통(롯데마트 등)을 중심으로 가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이 아닌 중국 현지에 진출한 롯데마트,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신현수(2017)는 이러한 원인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서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행위가 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Kim and Lee(2020)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와 중국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보복 조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의 수의 감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관광 수입이 약 30% 감소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과 관련된 주요 산업(여행, 화장품)의 주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만, Kim and Lee(2020)은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를 연구하였는데, 개별 기업 단위로 연구를 진행한 권용현·이지상(2018)은 중국과 관련된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권용현·이지상(2018) 역시 산업 단위에서는 연관성이 작다고 보았다.

한편, 신현수(2017)와 Kim and Lee(2020)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의 대응 방안으로 특정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부품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Kim and Lee(2020)는 이러한 보복조치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특정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무역 의존도 감소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역시 GDELT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6]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과 일본 간 어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는 GDELT Event Database 2.0 버전을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사건(event)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림 6]을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논의가 본격화되던 2016년 초중반부터 어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양상은 사드 배치가 공식화된 2016년 7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다가 잠시 회복하지만,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계기로 다시 악화된다. 이후, 양국 간 어조는 한동안 변동하다가 2017년 10월 말에 있었던 양국 간의 협의를 계기로 이전보다 긍정적인 수준에서 약 2년 가까이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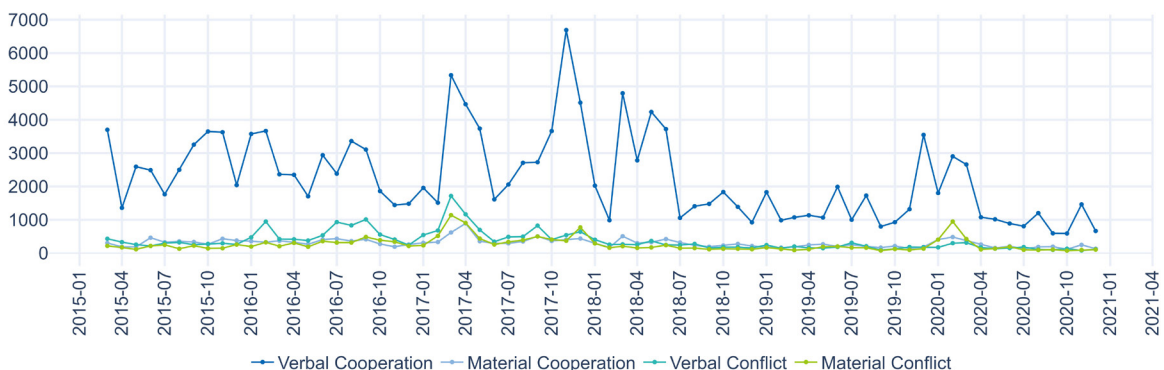
[그림 6] 한국과 중국 간 어조의 변화(GDELT 2.0 버전)



[그림 7]은 한국과 중국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를 나타낸다. [그림 6]과 마찬가지로 GDELT Event Database 2.0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이벤트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각 분류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7]을 살펴보면, [그림 5]와 마찬가지로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이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한편,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은 사드 배치가 공식화된 2016년 7월에 급격히 상승하여 한동안 유지되는데,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은 같은 기간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빈도가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의 빈도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2017년 3월인데, 이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관광이 전면 금지되다시피 하였고,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 절반 이상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17년 10월과 11월에는 4가지 분류 중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의 빈도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10월 31일에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이룬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극심했던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전체의 1% 이상 나타난 사건(event) CAMEO 코드는 25개인데, 이 가운데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에 해당하는 CAMEO 코드가 7개,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에 해당하는 CAMEO 코드가 3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에 해당하는 CAMEO 코드에는 「120 거부하다(Reject, not specified below)」(3.4%), 「111 비판 또는 비난하다(Criticize or denounce)」(3.1%), 「110 불만을 나타내다(Disapprove, not specified below)」(2.5%), 「130 위협하다(Threaten, not specified below)」(2.1%) 등이 있으며,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에 해당하는 CAMEO 코드에는 「190 군사력을 사용하다(Us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not specified below)」(3.1%), 「163 금수조치, 보이콧, 제재를 가하다(Impose embargo, boycott, or sanctions)」(1.9%), 「172 행정적 제재를 가하다(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specified below)」(1.5%) 등이 있다.

[그림 7] 한국과 중국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GDELT 2.0)



VI. 분석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이후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 발생한 두 가지 무역분쟁의 사례를 GDELT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무역분쟁 사례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무역분쟁과 더불어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국가 간 갈등의 전개 양상을 함께 분석하였다. GDELT에서 제공하는 어조(tone), CAMEO 사건 코드 등을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한 결과, 최근 한국이 경험한 두 가지 무역분쟁의 전개 과정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 GDELT에 기록된 사건(event)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 양국 간 어조(tone)가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국 간 어조는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에 악화되고, 이후 잠시 회복되기도 하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본격적으로 무역분쟁이 시작되면 다시 악화되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 사례의 경우,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직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가장 급격하게 어조가 악화되었다. 셋째,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양국 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빈도가 증가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두 사례의 경우,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만이 증가한 반면, 본격적으로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빈도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는 무역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즉,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상대방 국가가 정치적으로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확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중국은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에 바탕을 둔 한국의 외교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을 살펴보면, 일본은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stance)을 일본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변화시키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사건의 근간이 되는 한국 정부의 정치·외교적인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제제재 조치가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과 일본의 정치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중국의 지도부가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직접 심판받지 않으며, 경제 체제 역시 완전한 시장 경제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국가가 무역의 흐름을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idt and Gassebner, 2010). 달라이 라마의 공식적인 방문 및 고위 정치인과의 회담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Fuchs and Klann, 2013).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양국 간 국민감정이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므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상당한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중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제재 조치의 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거나 자체적으로 부품을 조달하는 데에 성공하는 경우, 한국 기업에 주요 부품을 수출하던 일본의 기업들이 다른 해외 거래처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 이는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는 최종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중간재가 거래되므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는 자국 내 기업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 국가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나 산업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두 사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무역 및 기술 의존도 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등의 의존도가 낮으면 해당 국가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를 크지 않다는 것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Heilmann, 2016). 따라서 이는 다자협력 레짐 참여와 같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권용현, 이지상. (2018). 외교적 갈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 연구, 47(1), 67-94.
- 2) 손정욱. (2019). 빅 데이터로 살펴본 국가 간 평화관계 분석: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한일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8, 47-97.
- 3) 신현수. (2017). 사드 이후 대중국 수출 동향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7년 7월, 78-87.
- 4) 이면우. (2020). 한일 무역분쟁 1년 평가와 향후 전망 및 과제. 정세와 정책 2020-8월호-제17호. 세종연구소.
- 5) 이재호, 고일동, 김상기. (2010). 동북아 분업구조하에서의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0-08. 한국개발연구원.
- 6) 정성춘, 김영귀, 이천기, 김승현. (2019).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7) 정인교 외. (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8) Aidt, T. S., & Gassebner, M. (2010). Do autocratic states trade les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4(1), 38-76.
- 9) Fuchs, A., & Klann, N. H. (2013). Paying a visit: The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1(1), 164-177.
- 10) Heilmann, K. (2016). Does political conflict hurt trade? Evidence from consumer boycot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9, 179-191.
- 11) Kim, H., & Lee, J. (2020). The Economic Costs of Diplomatic Conflict. BOK Working Paper, No. 2020-25.
- 12) McClelland, Charles A. (1976). 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WEIS) Codebook (ICPSR 5211).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Ann Arbor.
- 13) Schrodtt, Philip A. (2012). 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 (CAMEO) Event and Actor Codebook. <http://data.gdeltproject.org/documentation/CAMEO.Manual.1.1b3.pdf>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3.4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